

광주담양통합'에 대해 (담양 '부(府)'의 의미)

문화향기

박철홍

전 전남도의회운영위원장



'담양'은 1018년 고려 현종 때 담양이라는 지명이 도입된 이래 고려 말-조선 초부터 전라도 중심지로 발전해 왔다.

태종실록에 따르면, 조선태종 13년(1413년)에 전라도 '도절제사영'이 나주에서 담양으로 이전되었다는 언급이 있다. 이 말은 담양이 지금으로 말하면 당시 도청소재지였다는 말이다. 이후 '도절제영'이 '감영'(각 도 최고 행정기관)으로 변하면서 감영은 '전주'로 이동했다. 그러나 담양은 여전히 '부(府)'로서 중요한 지역의 하나였다.

즉담양은 종3품 '부사'가 발령이 되는 '나주목'과 동급의 주요한 고을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담양은 고려시대부터 호남 내륙 중심지로 남원·순천·광주·나주 등 주요 지역과 연결되며 군사·행정 거점으로 적합했다.

요즘 '광주·담양통합' 문제를 다시 제기하는 분들이 있다. 나는 광주·담양통합 문제가 한창 이슈가 되었을 때 통합반대 입장이었다. 그 이유는 현행법적으로 통합은 지금의 광주 광산구처럼 '광산군'이라는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광주에 편입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지금의 내 생각은 전남도나 광주시가 정치적 합의를 보고 국회의원들이 나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광주시담양군'으로 갈 수 있다면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 이 일은 쉽지가 않다.

'대구달성군'이나 '부산기장군'처럼 되기 위해서는 광주시와 담양군 통합은 현행법상 어려우며 '행정구역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 법을 제정하려고 하면 우선 전남도에서는 반대할 것이다. 담양이 그렇게 되면 광주 인근 접경지역인 화순·장성·곡성·함평 등도 통합운동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 입장에서 담양 하나도 놓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전라남도 출신 국회의원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들이 찬성할 리가 없다. 담양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도 담양만이 아닌 영광·장성·함평을 지역구로 같이 두고 있어서 앞장서기도 쉽지 않다. 담양 단체장도 담양군민의 지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예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 등으로 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어려운 난관을 산처럼 쌓아 두고 무조건적 광주·담양 통합을 부르짖고 찬성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담양군이 앞서 이야기한 '담양부'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는 현실적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다.

먼저 '광주·전남통합'이 이루어지면 된다. 한때 급물살을 타던 광주·전남통합이 요즘은 주춤하다. 광주·전남통합이 이루어지면 담양군 주도로 광주 '북구'나 '광산구'와 통합을 추진할 수 있다. 이런 경우 특별법 없이도 가능할 수는 있다.

이보다 더 좋은 국가적인 방법은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주장한 '강소도시'이다.

이회창 후보는 강소도시를 통해 균형 잡힌 국가발전을 이루고, 대도시와 지방간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

했다.

또한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대통령 자문기구였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발표한 행정구역 개편 구상에 포함된 내용도 있다. 이 개편안은 전국 234개 시·군·구를 약 60~70개 '광역시·시·군'으로 통합하는 매우 대대적인 개편 구상이었다. 그러나 당시 발표된 안은 담양을 장성·정읍 등으로 묶어도 경계를 넘어서 통합 안으로 지역특성이나 정체성·정치적 반발로 실현되기 힘든 완전 '줄속안'이었다. 이런 줄속안 때문에 담양에서는 그럴 바에 광주로 통합하겠다는 광주·담양 통합 문제가 본격 제기되었던 것이다.

'광주권 메가시티 정책'도 앞으로 눈여겨 지켜봐야 될 사안이다.

가장 좋은 방안은 도가 해체되고 담양군이 주도하여 광주북구와 광산구 일부 포함 인구 50만 정도 '강소도시 담양군'을 만들어내는 것이 현실성 있다고 생각한다.

담양은 고려시대부터 호남 내륙 중심지로 남원·순천·광주·나주 등 주요 지역과 연결되며 군사·행정거점으로 적합했고, 현재는 전국과 영호남 있는 교통 요충지로 경제, 관광, 거주, 농업 중심지인 강소도시로 우뚝 설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담양군'은 옛 '담양부'로서 명성을 되찾을 수 있다.

광주·담양 통합 문제는 담양의 천년대계가 달린 문제임으로 멀리보고 신중하게 접근해 갈 필요가 있다.

다만 이번 대선이나 내년 지자체 선거에서 우리나라 고질병인 중앙집권 집중화를 해소하고 치료하기 위한 대대적 '행정개편 안'이 나왔을 하는데 아직 그런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 많이 아쉽기는 하다.

社說

학내 혼란 키우는 지역 의대생 '수업 거부'

대규모 유급 앞서 대화 필요해

전남대·조선대 의대생들이 복학 이후 수업 거부로 맞서고 있다고 한다. 휴학중인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의대정원을 원복하겠다는 정부의 제안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료계의 불만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다. 문제는 지역대학들은 학사 정상화가 늦어지면서 대규모 유급에 따른 학내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남대 의대는 지난 7일부터는 모든 의대 수업을 강의실 대면을 원칙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면 강의 참여율은 과목마다 편차는 있지만 대체로 전체 수강생의 10% 안팎으로 저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대 의대는 의사 국가고시 응시 요건인 실습 강의 52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본과 4학년 부터 유급 여부에 대해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대 의대 역시 온라인 비대면 강의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소수만이 수업에 복귀한 상황이다. 조선대 의대는 현재까지 수업 불참 학생에 대해 당장은 유급을 고려치 않고 학년 말에 확정·통보할 방침

이다. 다만 교육부 방침 등 변수가 많아 유급 통보 시점이 바뀔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유급은 학년 말에야 확정되지만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 확정 시점과 맞물려 올해 유급 통보를 서두를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대학이다. 각 대학은 현재 본과 3·4학년, 예과생들의 수업 일수가 미달되는 이달 말이면 유급 예정 통보에 나설 수도 있다. 의대생들의 대량 유급이 현실화할 경우, 내년도 의대 학사 운영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비관론도 나온다. 의대생들의 단체행동은 정부를 향한 반발 분위기가 크다.

내란과 탄핵, 대통령 파면으로 국내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경제는 미·중 갈등으로 풍전등화이고 내수 침체로 골목상권은 죽을 맛이다. 이런 어수선한 상황에서 의료계의 행태는 많이 아쉽다. 정책의 연속성은 있지만 과거 정부와의 앙금은 이제 접어야 할 때다. 곧 새로운 정부가 태동한다. 영커버린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내도록 의료 문제 해소를 위한 대화의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 길어지는 의정 갈등에 '참의사'를 끌꾸는 의대생마저 전전긍긍에 내몰리는 모습이 아쉽다.

급식 노동자 '직업성 폐암' 산재 왜 미루나

시설 개선 등 환경도 바꿔가야

광주·전남지역 노동단체가 조리실 노동자의 폐암 진단 사례를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성명을 내놨다. 노동부가 급식 노동자들의 폐암을 개별 사례로 치부해 산재 현황 파악이나 예방 대책을 외면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산재 여부를 떠나 아직도 조리실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환경에 고통을 받는다는 게 안타깝다.

14일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에 따르면 2023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급식종사자 가운데 379명이 폐암 또는 의심 소견을 받았다고 한다. 기아차 광주공장 구내식당 조리원 2명도 폐암 진단을 받았다. 2023년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도 전체 급식실 종사자에 대한 폐암 검진 결과 4만 4548명의 검진자 가운데 이상소견자가 32.33%에 육박하고, 확진자만 5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런데도 지난해 7월 기준, 학교급식실의 폐암 산재승인은 근로복지공단 통계에서 143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전국적으로 이뤄지는 초·중·고 무상 급식은 대한민국의 자랑이다. 하지만 급식실이나 조리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환경은 생각보다 열악하다. 요리 과정에서 나오는 각종 유해 물질 때문에 호흡기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 경우가 속출하고 불이나 뜨거운 물·기름 등에 화상을 입거나 칼에 상처를 입는 경우가 다반사다. 무거운 도구를 들다가 허리나 손목 등을 다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사정이 이런데도 조리실 노동자들의 질량이 외상에 비해 인과관계가 명백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산재 판정을 받는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비참한 현실이다.

정부는 조리 중 발생하는 유해 물질에서 기인한 노동자들의 직업성 폐암을 산재로 인정하고 보상책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 자치단체와 교육청, 기업도 조리실의 환기시설을 개선하는 등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수년 전부터 제기됐던 조리실 노동자의 폐암 예방을 위한 요구들이 더 이상 계속돼선 안된다. 조리실은 어느 곳보다 위험하고 재해가 빈번한 산업 공간이다.



@jinilbo
진일보 인스타그램

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뉴스서비스입니다. 한발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

Kakao Talk : 진일보
E-Mail : jebo@jinilbo.com



서석대



"사리는 찾지 말고 수의는 절대 만들지 말고 내가 입던 옷을 입혀서 태워 달라. 그리고 타고 남은 재는 봄마다 나에게 아름다운 꽃 공양을 바치던 오두막 딸의 철쭉나무 아래 뿌려달라. 그것이 내가 꽃에게 보답하는 길이다."

무소유를 삶의 신념으로 지킨 법정(法頂) 스님은 생전 유언에 따라 관도, 수의도 없이, 화장된 뒤 강원도 수류산 방 인근에서 비공개로 산골(散骨)했다. 중국의 덩샤오핑(등소평)도 "각각은 기증하고 시신은 해부용으로 쓴 다음 화장해 바다에 뿌려달라"는 유언을 실천했다. 그의 유골은 홍콩 앞바다와 중국과 대만 사이의 바다에 뿌려졌다. 그는 "죽은 사람이 산사람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난센스"라며 이 같은 유언을 남겼다. 그는 사후에 자신의 기념관을 세우지 말고 동상도 만들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자연으로 돌아가겠다는 결심은 멀리 있는 이상이 아니다. 삶과 죽음을 자연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한국적 생사관의 한 축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매장지는 포화 상태고, 화장 이후에도 대부분의 유골은 봉안당에 보관된다. 여전히 장례는 허례허식으로 흐르고, 죽음을 자연이 아닌 건축물 속에 갇힌다. 올해 초 화장한 유골의 뿔가루(골분)를 산이나 강, 바다에 뿌려 장사를 지내는 산분장(散粉葬)이 시행됐다. 아직 인식은 여전히 낮설고, 법적 기반은 부족하다.

산분장의 가능성을 말할 때, 일본 나가노현의 '바람의

정원'을 빼놓을 수 없다. 그곳은 무덤이 없다. 대신 들쭉이 흐드러지는 야산에 이름 없는 재들이 뿌려져 있다. 남겨진 가족들은 해마다 같은 계절, 같은 자리에 찾아온다. 죽음을 기리는 것이 아니라 삶을 기억하려. 이와 같은 자연장 개념은 일본에서는 '후소(風葬·풍장)'라는 이름으로 오래 전부터 논의돼왔고, 특히 2000년대 들어 생태장 운동으로 확산됐다.

여전히 "무덤 없는 죽음을 허망하다"고 말한다. 어느 정도는 문화다. 어느 정도는 관습이다. 그러나 그 속에는 오랫동안 이어진 허례허식의 매장문화가 있다. 이런 풍경은 더는 효도도, 추모도 아니다. 공간은 부족하고 비용은 커졌다. 남은 자를 위한 장례가 아니라, 죽은 자로부터 남겨진 짐이 되어버렸다.

산분장은 '대안'이 아니라 '필요'다. 죽음을 화려하게 치르기보다, 조용히 보내는 문화. 더는 누군가의 공간을 빼앗지 않고, 자연 속에 다시 돌아가는 게 바로 삶의 마무리다.

산분장은 아직 낯설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죽음을 통해 자연으로의 복귀를 꿈꾼다. 허례허식 없는 장례, 단출하지만 풍성한 작별,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남기는 마지막 흔적. 그것이야말로 다음 세대를 위한, 가장 아름다운 작별 인사가 아닐까.

김성수 논설위원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 보도 실천 지역 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기사제보 (062)510-0331	경영지원팀 (062)510-042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취재1부 (062)510-0380 취재2부 (062)510-0394 정치부 (062)510-0340	문화체육부 (062)510-0351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사진부 (062)510-0391	
www.jinilbo.com m.jinilbo.com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FAX (062)510-0436	광고문의 (062)512-0100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inilbo.com